

급변하는 외식 트렌드... 식품업계, 빅데이터 투자 잔걸음

풀무원푸드앤컬처·파리크라상 등 디지털전환 통해 업무경쟁력 강화 데이터 기반, 소비자들 패턴 분석 자사 온라인몰 키워 데이터 수집도

식품업계가 빅데이터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 패턴을 분석, 이를 제품 개발에 적용하고 있는 것.

특히 급식·식자재 기업이 빅데이터 경영에 주력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풀무원의 계열사 풀무원푸드앤컬처는 KT와 손잡고 'DX 기반의 주방 스마트화 공동연구'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풀무원푸드앤컬처가 운영하고 있는 F&B 사업장 주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풀무원푸드앤컬처가 운영하는 F&B 사업장으로는 위탁급식, 휴게소 사업, 컨세션 사업, 전문 레스토랑 브랜드 등이 있다. KT가 보유하고 있는 DX(디지털 전환) 노하우를 바탕으로 노동집약적 근무환경을 스마트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데이터를 기반



지난해 서울 송파구 송파동 풀무원푸드앤컬처 본사에서 풀무원푸드앤컬처 이우봉 대표(왼쪽)와 (주)KT 성제현 강남법인담당장(오른쪽)이 협약 체결 후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CJ가 운영하는 CJ프레시웨이도 식자재 유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CJ프레시웨이는 올해 전 사업 분야의 주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 데이터 기반 경영을 본격화한다. 데이터 역량을 미래 성장동력 삼아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사업 기회를 끊임없이 발굴

함으로써 식자재 유통업계의 디지털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CJ프레시웨이가 디지털 전환에 나선 것은 상품기획, 영업, 물류 등 전 업무 영역에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CJ프레시웨이는 20여 년간 축적해 온 데이터를 한데 모으고, 중요도에 따라 데이터를 선별, 표준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업 연관성이 높은 유의미한 고품질의 데이터만을

자산화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분류 및 재정비가 이뤄져 부서별로 관리했던 정보들을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한번에 확인하고, 전사적인 관점에서 빠르게 업무를 파악, 의사결정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케팅 부서에서 조사한 현재 외식 트렌드와 영업 부서가 보유한 주문량이 많은 식자재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상품기획 부서에서 새로운 메뉴 또는 레시피를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 계열사 파리크라상도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서강대학교와 AI 산학협력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7일 체결했다. 파리크라상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강대와 함께 푸드 프랜차이즈에 특화된 고유의 AI 수요예측 모델을 연구 개발하고 최신 ICT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먼저 파리바게뜨 16개 직영점과 일부 가맹점 대상으로 AI 머신러닝 기반 판매 수요예측 시스템을 도입한다. AI 머신러닝 기반 판매 수요예측 시스템은 과거 판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날짜 지

수, 날씨 지수, 점포 주변 유동인구 데이터와 함께 프로모션, 점포 면적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판매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 수량을 산출한다.

일찍이 데이터 경영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기업도 있다. 바로 오리온이다. 오리온은 2016년부터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발생하는 판매 시점 정보 데이터(POS)를 구매해 자체적으로 분석했다. 소비자 수요에 발맞춰 실시간으로 생산 계획을 세움으로써 재고를 최소화했고 이는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로 직결됐다. 수치로도 나타난다. 오리온의 반품률은 2016년 2.8%에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 0.5%로 줄었다. 반품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hy, 동원F&B, 대상, 롯데제과 등 기업들이 자사 온라인몰 키우기에 열중하고 있는 것도 데이터 경영의 연장선상에 있다.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몰에 소비자들의 데이터들이 쌓이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소비자의 구매 성향과 패턴을 분석해 프로모션을 전개하거나 제품을 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차이나 뉴스&리포트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중국이 '인구 고민'에 빠졌다.

중국 역시 저출산과 고령화의 늪에 빠지면서 지난 40년 동안 경제성장의 호황을 가져다 준 가장 큰 기반인 인구가 매년 100만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팬데믹 기간 동안 출산율이 낮아진 것은 전세계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중국은 유독 하락폭이 컸고, 고령화 속도도 빨라졌다.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작년 출생 인구와 사망 인구는 각각 1062만명, 1014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인구 증가 수는 48만명이다.

출생 인구는 2020년 1200만명에서 11.5%나 줄면서 대기근 시기인 1961년(949만명 출생) 이후 최저를 기록



저출산·고령화 늪 빠진 中 출생인구 1961년 이후 최저 65세 이상 인구비중 14.2% 올부터 인구 증가율 '제로'

했다.

출생률도 1000명당 7.52명으로 전년 8.52명에서 더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8년 이후 최저치다.

인구 통계학자들은 중국의 인구가

오는 2025년부터는 연간 100만명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부에서는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도 보고 있다.

톈진 난카이대학 위안 신 인구통계학 교수는 올해 인구 증가율이 '제로' 단계에 들어서고,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인구증가 규모가 2020년에 204만명에서 2021년에 48만명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며 "인구가 감소 단계인 국가와 지역을 보면 인구 증가율 '제로'는 특정 연도나 특정 시점에 발

생하기 보다 몇 년에 걸쳐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인구 통계학자인 허 아푸는 올해부터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오는 2024년까지 신생아는 연간 1000만명 안팎에 그치는 반면 사망자는 1030~1100만명에 이를 것"이라며 "2025년 이후에는 전체 인구가 매년 100만명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고령화 속도도 빠르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로 집계됐다. 전년 13.5% 대비 0.7%포인트 상승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4%를 넘어섰다.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18.9%다. 중국에 대기근이 발생했던 1961년에 출생아 수가 줄면서 전년 18.7% 대비 0.2%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그러나 1962~1975년의 베이비붐을 감안하면 향후 60세 이상의 인구가 연간 1000만명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산업특성 고려한 정책으로 기후리스크 완충력 높여야”

한은 BOK이슈노트

단순 배출억제 규제는 산업에 부담 근본적인 산업체질 변화 병행 필요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을 고려해 정책적 불확실성을 낮춤으로써 기후 리스크에 대한 완충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내놓은 BOK이슈노트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 논의에서는 기후위기 극복과 경제 성장이란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조화롭게 풀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기후변화가 생

산성에 영향을 주는 파급경로를 살펴보고, 기후변화 시대에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먼저 지구온난화가 유발한 자연재해와 같은 일차적인 충격(physical risk)으로 인해 산출물이 감소하고, 노동과 자본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는 생산성 하락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상고온, 일조시간 감소, 이상기상의 빈도수 증가 등이 산출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유발하고 관광업 등 생태계서비스에 기반한 산업 부문의 위축을 가져오면서다.

또한 이상기후가 근로자의 건강이나 작업환경에 영향을 줄 경우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후변화의 물리적 충격과 더불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와 기후변화 완화에 따른 정책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리스크(transition risk) 역시 기업의 생산성에 기인했다. 대규모 투자조성을 위한 비용 및 좌초자산이 증가하고 산업 및 노동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미스매치로 인한 시장 비효율이 발생하면서 생산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기후변화 대응이 중장기 생산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및 기술진보를 가속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하면서다. 환경규제 정책은 기업으로 하여금 규제비용을 감소 또는 상쇄하기 위해 기술혁신 활동, 비용 절감, 효율성 개선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과 신생에너지로의 전환 등으로 신산업이 성장하면서 시장 및 고용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기후변화 대응이 기업의 무형자산적 가치로 반영되면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선영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을 고려한 부문별 감축 목표 세분화, 지속적인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정합성과 일관성을 갖춘 정책 설

계 및 운용 등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정책적 불확실성을 낮춤으로써 기후리스크에 대한 완충력을 높여야 한다"라며 "또한 경제구조 전환 시 높은 불확실성과 대규모 초기투자비용 등으로 민간의 위험감수 여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혁신 생태계 조성 and 연구개발 투자 육성에 있어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석탄발전, 제조업 등 탄소집약 산업의 비중이 높으므로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규제는 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따라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 총량 규제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한 에너지 전환과 저탄소 산업화 등 근본적인 산업 체질의 변화가 중장기적 시계에서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